



'06년 국가인증제도 혁신의 원년



기술표준정책과 기계사무관 안응수
(02)509-7221 kiremol@mocie.go.kr

I. 개요

세계적으로 표준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기업이나 국가의 희비가 엇갈린 수많은 예를 접할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 부문의 최강자 지위를 유지하던 모토로라는 유럽탕식(GSM)이 사실상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노키아 등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삼성, LG 등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기술(MPEG)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로열티 수입을 포함하여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표준이 산업의 인프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변수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업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신념으로 올해는 국가표준화 체제의 선진화, 국가적합성 제도의 정비, 국민생활의 안전 및 신뢰 기

반 구축,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II. 중점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

1. 국가표준화 체제의 선진화

○ 국가표준(KS)의 재경비

KS규격은 산업현장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기술·표준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KS규격이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당면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미래산업,

국민 삶의 질 향상, 주력 기간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KS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KS규격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신기술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KS규격에 지적

재산권이 포함된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표준개발기관과의 MoU¹⁾추진하여 선진 표준을

<국가표준(KS) 개발 계획>

중점추진분야	추진계획
미래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성장동력분야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도입 추진
삶의질향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장애인용 재활·보조제품 및 생활용품의 소외계층 배려 설계 지침 등 개발·보급
주력기간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환경성 제품의 KS규격 정비 및 보급 확산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KS규격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규격의 내실화이다. KS규격은 지난 5년간 양적 성장에 치우쳐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활동 빈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정대상을 선정할 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보완하여 201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것

이다.

현재 KS규격과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규격들 간에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설비의 중복투자 및 이중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07년 완료를 목표로 정부규격 통일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규격 통일화 사업 추진 계획>

구분	05년	06년	07년
통일화 추진	258종	176종	170종
통일화 누계	2,262종(86.7%)	2,438종(93.5%)	2,608종(100%)

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추정된다는 보고서에 알 수 있듯, 표준은 기술발전과 환경, 안전 등 국가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의 활용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 법령에 KS규격 및 인

증제품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규격 열람방식을 통합하여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국가표준, 국제표준, 해외 기술기준 등의 표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

1)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이다. 아울러, 생활표준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표준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이 표준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 표준화 활동의 기반 확대

이상의 국가표준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준화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측정표준 분야²⁾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용 시약 등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 간 표준물질의 공동개발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물질 D/B와 연계된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참조표준³⁾ 분야에서는 참조표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평가,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모두가 함께 참조표준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다.

국가표준 개발 시 민간 표준화 역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PSDO)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국가표준의 확산 거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시 표준화 동향조사를 통하여 표준화 진척을 수렴하고, 교수, 연구원 등 과학인력 평가에 표준화실적을 반영토록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남·북 표준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는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표준통합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단계별 협력사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전력 분야 등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 강화

세계 각국은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치열한 표준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표준의 채택이 국제시장의 선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표준 분야에서 올해는 디지털 TV, 차세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35건을 제안하여 08년까지 국제표준의 주도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표준화 거점기관을 육성하여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ISO의 표준관리이사회 및 의장·간사 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신규 이슈 분야에 대한 대응포럼⁵⁾ 운영하여 국제표준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이 시행되는 ISO의 Global Directory⁶⁾에 발맞추어 국제표준의 제·개정 시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 640여건의 새로운 기술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규제를 수출장애요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품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상기술장벽(TBT)⁷⁾ 신고센터(신문고)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에서 애로상담부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자동통보시스템(Auto Alert)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인도 등 신규 FTA 체결 예정국가를 상대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

2) 측정, 시험분석 장비로부터 얻은 Data의 정확성을 비교,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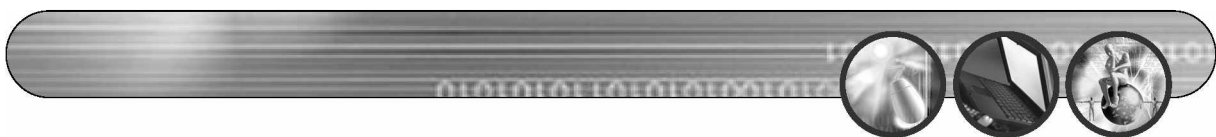
3) 인체치수, 인체유전자지도 등 측정·공인된 통계 등

4) PSDO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협회, 학회 등 표준개발 능력을 갖춘 기관을 국가표준 초안 작성기관으로 활용하는 제도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SC)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응 조직

6) ISO 국제표준 제 개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회원등록 및 문서회람, 투표절차 등)

7)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여 상호인정협정(MRA)⁸⁾을 추진하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2. 국가 적합성평가 제도의 정비

□ 범국가인증제도의 혁신

06년은 국가인증제도 혁신의 원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3개 인증 분야별로 성비를 추진한다. 국제규범에 맞는 인증기준과 절차로 통일하고, 중복된 인증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혼란 방지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단일체계의 번호를 부여하여 정부 규격의 인증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아갈 것이다.

□ KS 인증제도 개선

KS인증제도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S인증을 제품분야 이외에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 관련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KS인증에 대한 자기적합선언제도(SDoC)⁹⁾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심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KS 인증업체에 대하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현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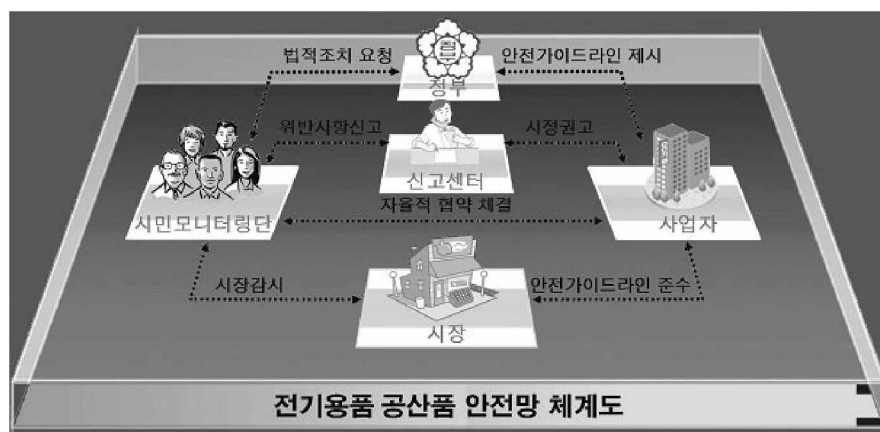
3. 국민생활의 안전 및 신뢰 기반 구축

□ 온라인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가 급증하고 사이버몰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기존의 Off-line 방식의 안전감독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전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On-line 안전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소보원, 안전검사기관 등과 안전정보망을 연계하고, 모니터링단과 신고센터, 기동반을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 실량표시 및 법정계량 제도 선진화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260조원의 상품거래가



8)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9)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제품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공급자 스스로 선언하는 제도



이루어지며, 약 1%의 거래요차는 부려 2.6조원에 달한다. 법정계량 분야에서는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실량 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석합성선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EU 수준의 실량검사기준을 제정하고, 실량부족 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서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측정기, 유량계 등 법정계량기 품목을 확대하고, 불량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정착을 유도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4.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기술혁신의 기반 강화

오늘날과 같은 첨단산업 시대에서는 측정기술 정밀도의 향상 없이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측정기술을 향

상시키기 위해 시험연구원의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뢰성 평가 지원을 통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시켜 산업을 지탱하는 뿌리를 더욱 견실히 할 것이다.

□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금년 1월부터 5개부처 7개 인증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기표원은 신제품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 개발된 업무편람을 활용하여 신속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기술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인증기관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신제품(NEP) 인증 심사절차〉



※ Fast-track 심사 : 신기술(NET) 인증제품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와 제품평가를 생략하여 신속한 인증업무를 수행

III. 향후계획

이상의 표준, 안전, 기술혁신 지원의 3대 미션과 이에 따른 이행과제에 대하여 각 분야별 성과지표를 설

정하고 분기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